

국회 측 “尹 헌정질서 짓밟아… 신속하게 파면돼야”

현재尹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국회 대리인단 최종 종합 변론서
“尹 오염시킨 헌법 풍경 돌려놔야”
尹측 ‘12·3 비상계엄’ 정당성 강조
“野 정책 발목잡기·입법 폭거 때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25일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국회 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운을 뗐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고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변론 과정에서 실무 공격수 역할을 해 온 장순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의 말과 풍경’을 오염시켰다며 파면 결정으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작년 12월 3일 대국민담화를 두고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고 비판했다.

또 계엄 포고령에 윤 대통령을 비판해 온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선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며 현재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작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오전 1시 6분계엄군이 무장한 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영상이 담겼다. ▶ 2면에 계속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광주 동구 지산동 주택철거 가림막 붕괴 25일 광주 동구 지산동에서 건물 철거 가림막 붕괴로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들이 가림막 구조물을 해체하고 있다. 이날 작업자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 관련기사 4면 김양배 기자

광주·전남 등 ‘여의도 15배’ 그린벨트 풀다

최상목,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전국 15개 사업 42km² 내년부터 해제
광산구·담양·장성 미래차 산단 조성

정부가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기 위해 17년 만에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면서 광주와 전남지역의 미래차 산업단지 조성에도 물꼬가 트였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제외

한다. 규모는 여의도(2.9km²) 15배 크기인 42km²로 광주, 전남과 부산, 대전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의 그린벨트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1분기에 신속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향후 약 49조5000억원의 투자 이행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발표로 인해 광주 광산구와 담양, 장성의 미래차 산단은 총 323만5243㎡ 규모의 자동차 산업 및 연구시설로 1조 200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된다.

이에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을 단순한 산업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RE100 실현을 위한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는 미래차국가산단이 본격 가동되면 지역 생산유발효과 약 1조7384억원과 1만1829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달 최상목 권한대행과

시도지사협회 임원단이 오찬 간담회를 통해 취합한 지역 건의 투자 애로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1분기 중 신속 추진이 필요한 3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해 우선 지원한다.

이에 전남은 신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평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다음 달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할 18건의 프로젝트가 향후 총 49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이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선정된 15개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새로운 지역투자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지침이 신설된 이래 첫 번째 선정 사례이자 17년간 변함없었던 지자체가 해제·활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을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3면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에어렉스 AIRREX 2025 70% 정부지원 이동식 에어컨

최고 명품 1등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만의 특혜!!



(2구) HSC-5400R (3구) HSC-6100R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신청기간 선착순 (현재 접수중)

	HSC-5400 R	HSC-6100 R
판매금액	1,600,000	1,800,000
정부보조금	1,041,000	1,199,000
자부담금(약)	559,000	601,000

※부가세 별도입니다.

담당자 : 총괄이사 상담문의 010-7532-5326

2025년 고소작업대 1000만원 정부무상지원

★고소작업대★를 아래와 같이 정부에서 1,000만원 무상지원 구입건입니다.

정부에서 작업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해 이동식 고소작업대를 아래의 (자사부담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지원규모 900~1,100만원 / 무상지원
- 지원내용 고소작업대 (지주코리아/수성)
-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신청기간 선착순 (현재 접수중)

	품목 (작업발판높이 기준)	판매가격	공단보조금	자체부담금
지주코리아	JC-30 (8m)	20,500,000원	11,182,000원	9,318,000원
	JC-31 (10m)	22,500,000원	11,182,000원	11,318,000원
	JC-40 (12m)	26,500,000원	9,086,000원	17,414,000원
수성	SSL-0812H (8m)	21,000,000원	11,182,000원	9,818,000원
	SSL-1812H (10m)	22,500,000원	11,182,000원	12,818,000원
	SSL-1212H (12m)	27,000,000원	12,086,000원	14,932,000원

※ 고소작업대 4m/6m도 있음

※ 부가세 별도입니다.